第264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임 시 회 의 록)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1月23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審査된案件

1.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 1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에 들어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위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는 북핵 문제와 6자회담, 한미자유무역협정,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문제 등 국익과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우리 위원회의 정책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들을 심의함에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들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주 국회사무처 전보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제민 행정사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 결과를 비롯하여 6자회담 등 최근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대책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14시15분)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 결과와 6자회담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질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협상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비공개회의 별도 보고는 오늘 회의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공개회의에서 협상 내용

이나 성과 등을 최대한 공개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의문 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여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의 중 공개회의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 공개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비공개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우리 측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현재 유출 경위에 관한 진상이 조사 중입니다마는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국가 기밀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 특성상 대외비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정부는 대외비 자료의 생산부터 배포, 회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한미FTA 협상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도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박진 위원 오늘 장관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 결과와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 측의 협상 전략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고, 특히 6차 협상이 진행되던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된 것은 충격적이며 매우 유감입니다.

국익과 직결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의 협상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협상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 만큼 반드시 정확한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밝혀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건경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마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더욱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특정 국회의원을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듯한 주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1월 13일 국회 한미FTA특위 보고 이후 공개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마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국회에의 보고 자체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운이 걸린 FTA 협상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이런 국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국회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심사해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파문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번 문건 유출 파문의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는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상임위 및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고 여야 간사와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교통상부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교는 2007년 한 해에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금년에도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 임명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제2차관입니다.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입니다.

심윤조 차관보입니다.

박준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한곤 의전장입니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조희용 대변인입니다.

김재신 아시아태평양국장입니다.

조병제 북미국장입니다.

임근형 구주국장입니다.

임한택 조약국장입니다.

송영완 국제기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지금 이 시간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단 간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외교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6자회담의 진전과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보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토대 구축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대외관계의 기본 축으로서 금년에는 양국 간의 주요 동맹 현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원만하게 이행하면서 한미 관계가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서로 존중하는 한일 관계를 정립하고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우리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20여개 주요 교역국가와 추진 중인 FTA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결 시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면서 협상에 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국회에도 협상 진전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국회의 의견을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진, 테러 방지, 군축비확산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과 대외원조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해외 여행객 6000만 그리고 재외동포 700만 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친절한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권발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모든 영사업무를 국민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조직으로 거듭나기 외교역량 강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역량 강화는 인사 및 조직 분야에서의 구조 개혁, 외교 인프라의 확충, 외교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참여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도 강화하여 외교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외교 인프라 확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교업무와 영사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교인력 증원과 재외공관의 확충 그리고 예산의 증액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 인프라 확충은 총체적인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에너지·자원외교를 적극화하며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외교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정부 전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분산되어 있는 국가 외교자원을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세안 플러스 3 관련 정상회의 결과, 북한 핵문제 현황, 국군포로가족 북송사건 및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 순으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 플러스 관련 정상회의 결과는 시간관계상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5쪽 북한 핵문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22일간 북경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초기단계 조치 및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측의 적극적인 구상 제시로 일부 상황 반전이 있기도 하였으나 북측의 금융 문제 선결 주장으로 구체적인 진전에는 이르지 못하고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고 휴회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회담 계기에 금융조치 문제와 관련한 미·북 간 별도의 양자협의도 개최되어 실질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번 회담에서의 주요국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미국은 초기단계 조치와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회담 기간 내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적극적 협상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초기단계 조치에 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융조치 문제 해결 이전에는 비핵화 관련논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초기단계 조치 합의를 북측에 강력히 권고하는 등 회담 진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난번 회담에서는 북측의 금융조치 문제 선결 입장 고수로 아쉽게도 초기단계 조치 등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6자회담 과정 및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가 재확인되었고 초기단계 조치 및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제시되었으며 금융조치 문제에 대한 미·북 간 실질적 협의가 개시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에 따라 차기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정부는 동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차기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해 저의 방일·방미 시에 관련국들과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등 적극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5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 및 9·19 공동성명 이행 관련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미·북 간 사전 접촉 및 관련국들 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심층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기반으로 금번 미·북 간 베를린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북 베를린 회동 및 힐 차관보 방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월 16일~18일간 베를린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동을 갖고 초기단계 조치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 이행 관련 구체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양자협의로서 금번 회동의 구상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금번 베를린 회동에서 미·북 양측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총 9시간에 걸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일단 금번 회동을 통해 차기회담 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동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차기회담 재개를 목표로 하여 관련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한미 협의에 이어 금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 및 재개 시 생산적 결과 도출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시간에 남북 간에도 그런 회담 재개와 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차기회담 개최 시에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외에도 관련국들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 전략적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저의 이번 주 중국 방문 계기 등을 활용해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3쪽, 국군포로가족 북송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군포로가족 북송사건과 납북자 최욱일 씨 사건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국을 위해서 중국과의 사전에 조율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환 관련 업무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우리가 예견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국군포로 및 가족 그리고 납북자에 대한 우리의 영사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추가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 국군포로 및 가족의 송환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대중국 외교 교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월 25일~27일간으로 예정된 저의 중국 방문 시에도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쪽, 한미 FTA 제6차 협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차 협상이 지난 1월 15일~19일간 총 19개 분과 및 작업반 중 14개 분과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무역구제 분과 및 자동차·의약품 작업반 회의는 지난 5차 협상 기간 중 중단된 바 있고 5차 협상 이후에도 미 측이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금번 협상에서도 이들 3개 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위생검역 분과 회의는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분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미 측의 입장에 따라 금번에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협상 주요 결과입니다.

금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현안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전전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번에는 양측 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 및 분야별로 양측 수석대표와 해당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을 통해 협상 진도를 점검하고 주요쟁점들에 대한 절충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앞으로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향후 양허협상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상품 양허안에서 중간 양허단계 품목 약 500개 및 기타 품목의 50%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해서는 미 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진전이 미흡하였습니다.

농산물 양허안에서 세부 품목별로 양측 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양허안 개선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우리 측은 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서 양측은 그간 명료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 절충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협정문 협상에서는 주요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에 대하여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하거나 타결방안 모색에 진전이 있었고 양측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제7차 협상은 2월 10일~1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7차 협상에 앞서 양측 수석대표 등 고위급 간 협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쟁점에 대한 조율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입니다.

송 장관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

무를 맡게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특히 우리 북핵 위기가 송 장관님 시기에 위기가 위기로 그냥 정체하느냐, 아니면 이 위기가 기회로,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어떤 중요한 전환기에 중책을 맡게 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 천영우 대표께서 베이징에서 중국 측 대표와 북한 측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대개 논의될 중요한 사안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9·19 공동성명에서 초기단계에 서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번에 전체를 다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또 북한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미·북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이 이미 9·19 공동성명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합의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행되는 그러한 틀까지 조기에 합의되도록 그렇게 남북 간에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 문제는 매우 중대한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힐 차관보하고, 힐 대표와 북한 측 대표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베를린 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전제로 해서 지금 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베를린에서 협의에 앞서서 한미 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1월 4일, 5일에 걸쳐서 미국의 당국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베를린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베를린 논의는 결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논의의 개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평양과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하고 다시 힐 차관보가 여기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미북 간 협의와 동시에 또 남북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각 측근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남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작년 11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화영 위원 그때 미국 부시 대통령께서 종전협정에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공동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이런 문제도 9·19 공동성명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지금 이야기하는 정전을 끝낸다는 것이 종전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화영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현재 그 문제까지는 진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일정한 합의에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그런 대통령의 지침을 가지고 회담이 진행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측의 관심사항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 더 나아가서 다른 여타 나라의 경제적 지원 문제까지를 이번 기회에 협의하고 협상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개괄적인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초기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협상을 큰 틀에서 염두에 두고 관련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고 더 나가서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를 하게 되고 남북한의 평화협정에 서명을 함으로 해서 남북한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고 그러한 새로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아주 이것이 소망스럽게 잘 진행이 된다면 북한이 핵을 모두 폐기하고 미국이 일정 정도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상황으로 진전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러한 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난다고 했을 경우에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면 이와 같은 내용들도 협의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중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상적인 상황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보다도 내용의 중심에 대해서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핵을 폐기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하고 또 북한과 관련국들은 관계가 정상화되고 제재가 해제되고 평화체제로 가는 이러한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송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의례적인 이벤트 위주의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남북 간의 체제가 이전과 달라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협약이나 협정도 조인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지금 실체가 준비가 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정상적이지 않은 휴전체제 또 정상적이지 않은 안보구도를 정상적인 구도로 바꾸어 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이 특정정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어떤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아주 심각한 질서의 재편에 관련된 국가원수로서의 고도의 행위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성들을 좀더 정확하게 외교부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죽 말씀하셨던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져서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 상태 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인식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심양에 가서 총영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양 총영사관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 행정관이 해고된 것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민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쪽 형편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총영사관에서 탈북을 권장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자가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남쪽으로 데려오려는 일련의 어떤 노력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항의를 받는 구조이지요, 지금? 왜냐하면 탈북을 우리가 방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화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납북 어부를 백두산 인근에서 심양으로 데려오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양에 비자 수요가 엄청 많고 또 이와 같은 탈북 문제가 상당히 수요가 많은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심양 총영사관을 기계적으로 영사 4명인 이런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존경하는 이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심양 총영사관의 업무환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3분의 1이 심양 총영사관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양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원을 증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많다는 것으로 어떤 형태의 실수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인력과 폭증하는 업무

그리고 업무내용의 민감성과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우리가 통제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제가 이번 주말 중국에 가서 중국 고위 당국과 우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중국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혹시 업무내용도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 제약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1분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 탈북자대책 타스크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주무부서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화영 위원 통일부가 주무부서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외교부가 주로 주무부서처럼 인식되어져 있는데 이 타스크포스도 좀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스템도 다시 정비해 가지고 송 장관님 이번에 장관님 취임하신 계기로 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자꾸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부에 접수되면 통일부에서 외교부에 알리기만 하고 외교부에서는 또 일선 총영사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는 단위가 좀 애매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통일부장관이던 정동영 씨가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는데 그때 제3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가 남북 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남북한 제3국 비밀접촉설, 특사교환 임박설 이런 것이 정가에서 많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작년 말 홍콩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소위 남북한 제3국 비밀접촉설인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설은, 그 설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봉 위원 특사를 교환하는 문제에 관련한 비밀접촉이 없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특사교환이 없다기보다 남북 간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접촉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특정목적을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없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해봉 위원 그다음에 금년 1월 8일에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의 이야기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사교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고 또 금년 1월 1일자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 장관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외교·안보 장관 두 분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소신과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봐서 핵실험 위험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시기로 보는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 질의에서도 가정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핵실험 위험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이 시기가 맞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아까 이화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체, 다시 말씀

드려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고 관련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도 남북을 포함하는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이러한 실체가 중요하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상회담만을 해서 형식에 집중해서 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할 때도 정상회담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열려 있는 문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해봉 위원 예, 그다음에 역시 그것 관련해 가지고 2000년에 정상회담 성사 과정을 살펴본다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널리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마는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 5000만 불 면담료 북한에 지불한 것,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00년부터 매년 쌀이 한 40만t~50만t, 비료가 한 30만t 이렇게 북측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년 9월에 판문점을 거쳐 가지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송환되었는데 이것도 남북 공동선언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선언문에 없으면서도 양 정상 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면 북측에서 금전이든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것이든 간에 많은 요구를 할 것이 틀림없는데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우리 쪽에서 주어야 될 선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상회담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린 대로 그 내용에 들어갈 실체,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주고받는 것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봉 위원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론이고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제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으로 조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봐서라도, 물론 그동안 핵 포기를 한다든지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까지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거의 난망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에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남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초당적이고 비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된다는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있는 동안도 그러한 비정치적 차원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진전시키고 가장 잘 진전된 상태에서 또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인계받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지 국민의 여론도 다음 정부 할 때까지는 그만 해라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있는 1년 이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핵 폐기라든지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1년 이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5년이라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해봉 위원 5년이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이 정권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발전시켜서……

○이해봉 위원 그러니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상으로 봐서 대체로 1년쯤 되면 그것이 합의가 좀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최대한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봉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베를린 접촉 이 문제가 언론에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가 진전되어 가지고 6자회담에서 타결이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실현 가능성은 우리 혼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고 지금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납북자 문제하고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하고 납북된 어부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안 그러면 북한의 주민입니까, 안 그러면 제3국 국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다 우리의 관할을 받는 국민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중국 땅의 관할에 들어갔을 때는 중국의 국내법과 중국과 관련한 국제법이 있어서 거기에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법 적용은 중국 법도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북한에 있는 한은 북한 법도 적용받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 국민입니다.

○이해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헌법에서도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국민으로 완전히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30년 전에 베트남전 했고 50년도 더 전에 한국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유해 발굴작업을 지금까지도 많은 정성과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한테도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고,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제주 인근에서 이스라엘 선원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 유해 찾는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죽은 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많은 제약을 가해도 별로 국가에 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북한에 납치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중국하고의 외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늘 중국이나 북한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가 결국 뒤통수나 맞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본들 똑같은 답변만 나올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쌀과 비료도 지원을 해야 되고 기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이 문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북한의 납북 어부 문제하고 국군 포로 문제를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과 베트남도 유해 발굴하고 포로 송환하고 이런 과정을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계속 발전시켜서 결국은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우리의 납북 어부 또는 포로, 유해 이런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해봉 위원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또 중국하고 외교관계로 보아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얻는 것 대신에 양보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외교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표현이 눈치본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외교부로서는 눈치 안 본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존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평소에 늘 그럽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북핵 문제처럼 엄청난 사태가 있지 않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우리 포로 잡아놓고 보내 주지도 않고 또 탈북자들을 새로 잡아가는 이런 마당에 계속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그 문제는 서로가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되 대신에 우리도 국군 포로도 좀 돌려달라, 탈북자도 잡아가지 말라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대북 식량 비료 이런 지원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봉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애매한 답변보다도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분명하게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박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미FTA협상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와 비공개 회의석상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사태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다음 “국회 특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의기관으로 책임과 권위를 세워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향후 국회 보고와 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엄격한 보안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국회에 전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훈 수석대표도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공개 대외비 문건에 대한 성격 규정 이전에 제가 한미FTA특위 회의록을 뽑아 왔거든요. 이것이 배부된 것이 시간을 알아봤더니 10시 22분이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이 죽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건을 죽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재형 위원장께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한 것이 오후 1시 6분입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이 문건이 이렇게 거의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외교통상부,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이 정도 내용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절대……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이야기대로 이것은 협상에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비공개회의라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모든 분이 다 있는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그 문건 유출 책임의 소재를……

○권영길 위원 제가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보도가 된 이후 정부는 외교부든 다른 정부기관이든 전부 1차적으로 국회에 다 책임을 떠넘기고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하고 있거든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니까 국가기구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권영길 위원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모든 언론기관, 의원들 또는 전문가들 여러 학자들에게 ‘협상 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 : 견제와 비판에도 정도 지켜야’ 이런 문건을 다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여기에 보면 전부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면서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차협상 대응방향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 1월 19일자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의원들, 관계기관, 언론기관 모든 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셋째 줄에 이것이 왜 들어갑니까? ‘거리에 선 9석 정당 민주노동당’ 이것은 6차협상 대응방안 대외문건 유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속에 앞에 쭉 경위를 써 놓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의 FTA협상 반대 기사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를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이 유출의 대상자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기구가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체결지원위원회 관계자가 출석을 못한 것 같은데요.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착오라고, 지금 그렇게 첨부되어 있는 것은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이것은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예단을 하지 않는 것이……

○권영길 위원 조사결과 이전에 모든 언론기관, 여러 위원들한테 다 배포가 돼서 이것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유출자로 암시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간 동안 모두 있는 데서 공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묻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금융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KDI에서 나온 나라경제, 정기간행물입니다. 2006년 12월에 나왔거든요.

필자는 한·미FTA협상단 금융서비스분과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협상단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작년 12월호에 우리 신금융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용어를 썼지만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FTA 금융서비스분과 과장이 공개된 정기간행물에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과연 이번에 대외비로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김현종 본부장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요, 이따가 끝나고요.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금융서비스 허용 여부 부분을 대외비로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제윤 국장께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금융 분과의 기고문은 일반적인 상황과 미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보도자료에 밝혀진 우리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유보안의 상세내용은 전혀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길 위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일반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금융상품의 양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 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답변할 때는 그렇게 말씀 듣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겠습니까?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협상단의 주 분과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무역구제에 관한 정부의 일련의 발언을 죽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반덤핑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유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도 그저께 이야기했지만 이미 한국 측의 양보의사를 읽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누가 봐도 아마 반덤핑도, 신금융상품도 한국이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양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담아서 대외비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번에 반덤핑을 양보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것을 더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구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반덤핑 부분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만

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양보를 하고 얻을 게 뭐 있을 것이냐, 이것을 양보한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은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 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으면 민주노동당은 실명으로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반덤핑도 양보하고 쇠고기도 양보하고 스크린 쿼터도 선결조건으로 양보하고, 도대체 우리가 얻어낸 것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의 문건 유출 건에 관해서 정부가 이토록 일방적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나오는 것은 저의 견해는 아닙니다마는 협상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행정부가 어떤 책임이나 이것을 국회에 넘긴다든지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 이런 상황은, 지금 문건 유출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주는 언급이나 조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자마자 집중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토록 중요한 문건이 무려 3시간 가까이 위원들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상 위에 3시간 동안 놓여져 있다는 것은 방치된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해 '나라경제' 12월호에 이미 내용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철저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레시안에 두 장짜리 비공개 서류가 한 장으로 사진이 찍혀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협상 막바지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 유감스럽고, 특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 생각을 확인해 준다는 차원에서 협상 팀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협상은 잘 아시겠지만 총만 안 든 전쟁인데 지금 작전계획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것이고 또 상대방 수석대표도 우리 수석대표한테……

○권영길 위원 제가 절차적인 문제만 질의를 했었는데 내용 가지고 하면 저에게 질의시간을 더 주십시오.

해명성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팩트를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만 제기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해명성 답변을 하고 있으면 저에게 추가 질의를 주시든지 답변을 중지시켜 주든지 하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웅 답변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세 시간 동안 이것이 비공개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10시 20분에 비공개서류를 나누어줬고 그다음에 3시 6분에 비공개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하루 전날 서류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날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좀 빨리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유출된 자료 내용이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권영길 위원 아니, 다시 설명드리지만 12월호에 이미 허용하겠다고 분과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3페이지에 걸쳐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은 위원님, 자세히 읽어 보시면 개괄적으로 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상 전략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정책 질의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대외비 자료의 생산, 그리고 배포·회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사건이 안 발생하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장님,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권영길 위원님께서 기왕에 FTA 협상 대외비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수석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협상 전략과 관련된 문건이 실제로 공개됐는데, 이것이 국익에 미칠 영향이 참으로 국가기밀에 해당될 만큼 중대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에 공개돼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 이전에는 한번도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협상단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유출 사건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최성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돼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협상 내용이 국익에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별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만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우리 자체로만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전말이나 경과를 지금 상대편들이 유심히 모니터하고 있다는 측면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아니, 인터넷 매체에 이렇게 모든 정부의 협상 전략이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당연히 국익에 중차대하지 그것을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무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한번도 나간 일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말씀은 다시 드릴 수 있고요.

○최성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중대한 사건인데 외교부는 그날 이 자료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그 특위에 참여했던 여야 위원들이 공개회의 때 배포됐다, 또 연필로 대외비가 됐다, 대외비 자료 줄 때 해당 특위 위원들 사인을 다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관리가 뭐가 잘 됐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필로 써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

○최성 위원 아니, 사인을 받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대외비 자료는 배포 사본 번호로 해 가지고, 지금 특위가 1월 13일에 열린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죽 관행적으로 해 왔던……

○최성 위원 좋습니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연필로 썼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내친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께서 10시 22분에 배포를 하고 1시 6분에……

○최성 위원 그것은 권영길 위원님 해명이고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지금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중간결과가 있습니까? 장관님, 어

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의원을 상대로 조사했거나 의원과의 연계성 부분들이 일정하게라도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직 지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 기밀유출과 관련돼서 책임성이나 자체 정부 내 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조사가 종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성 위원 저는 우리 수석대표님이나 여기 관계자들 계시는데, 지난번에 통일부를 상대로 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역에 대해서 통외통위에서 비공개자료를 열람했지요? 그때 제가 분명히 통일부장관과 직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내일모레 일간지에 나오게 될 경우 과연 이렇듯 엄격하게 여야 위원에게 비공개를 요청하는데 자신하느냐? 2, 3일 후에 주요 일간지에 남북협력기금 내역의 통계 숫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통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제대로 협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 대해서 철저히 등급을 매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관리를 하고 또 실제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 처벌도 하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하고 앞으로 보다 더 체계화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통상협상에 제2, 제3의 대외비 유출 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이러한 일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진행중인 조사가 완결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요한 처벌,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예, 수석대표님 됐습니다.

6자회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송민순 장관이 말했던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자회담의 재개 시점을 현재로서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구정 연휴 전에는 시작이 돼서, 과거의 관행을 보면 여러 가지 캘린더를 봐서 구정 연휴 때는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다들 이렇게 긍정적 흐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긍정적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토론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이지 앞으로 회담이 열렸을 때 결과까지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빠르다고 봅니다.

○최성 위원 BDA 문제에 대한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빠릅니다.

BDA 문제를 포함해서 핵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윤곽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지 지금 합법, 불법 나누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빠릅니다.

○최성 위원 6자회담 남북대표 간 접촉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의제나 대화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9·19 공동성명의 앞부분, 초기단계에서 서로 구체적으로 취할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최성 위원 북한이 핵 동결에 일정한 합의가 돼서 북·미 간에 초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나 또는 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문제, 또는 남북정상회담 문제, 이런 부분도 연계돼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연계시켜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 위원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6자회담 틀 속에서 같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우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부시 대통령이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시, 또 6자회담에 진전 시 종전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이런 긍정

적 시사를 했는데 만약에 북·미 관계가 급진전돼서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의 형태로 논의될 때 남북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현재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내용, 알맹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지금 어떤 형식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 외교부장관께서는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개헌 정국 논란과정에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초당적인 협의나 또는 국민적인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성사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상회담이든 또는 어떤 회담이든 간에 그 회담에 담을 수 있는 실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 위원 지금 6자회담과 BDA 해법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외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또는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우리 송민순 장관께서 장관되시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미 간에 포괄적인 협의 또 초기단계에서 합의를 논의하지, 실제 최소한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간 속에서도.

영변의 핵 동결 문제, IEAE 사찰 문제, BDA 문제, 북·미 관계 개선 문제, 지금 북·미 간에 일정하게 협의되고 논의되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저희도 이것이 우리 혼자 결정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그대로 보고하고 상의드리고 공개적으로 다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말고도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공개해서 말씀드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장관께서 국회에 대한 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협상의 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되고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 언론에서 도표처럼 나오는 내용에 어느 정도 일정한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야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의견을 정부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셔야지 아무런 논의 없이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면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윤곽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성 위원 그 윤곽이 뭡니까?

BDA 문제에 대해서, 합법자금과 비합법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느냐? 아무 언급도 없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DA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상황적으로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법 집행을 하고 또 영향을 받는 쪽이 북한이고 또 그 일어나는 장소가 중국이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협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 위원 최근에 북한에 제공한 UNDP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해서 일각의 언론에서는 네오콘의 역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UNDP의 대북지원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일정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압니다, 몇십만 불 정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보고자 합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FTA협상이 지금 6차 협상까지 왔는데 최종 타결까지 현재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협상을 하다 보면 좀 쉬운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되고 또 아주 까다롭고 핵심적인 이익에 걸리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당 부분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비공개에서……

○최성 위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6자회담, FTA 협상에 대한 새로운 내용, 지금 정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한데, 어떻든 오늘 초기 논의과정에서 협상 전략 대외비 문건의 공개 문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실체적 내용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소홀한 대책, 문제점 또 정부의 책임, 필요하다면 국회 내의 자체적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구분되어서 향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존경하는 박진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적을 하셨고 권영길 위원 또 최성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FTA 비밀문서의 유출 사건은 간단히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이해해 가지고 엄격한 조사가 실시 중이라니까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것이고 특히 정부 중에서도 FTA특위 담당 측에 있지 않나, 그것은 왜냐하면 대외비 문건이라고 했으면 대외비 문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배부자의 넘버링까지 다 되어 있고 반드시 회수를 할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자료가 없어진 것과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보도한 것 같은 식의 해명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상기시키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이번 유출에 대해서 미국 대표단까지도 사실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사실 나라의 망신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국익에 관계된 그런 중대한 문건조차도 보안을 못 지키는 한국정부가 외국에서 주는 정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북한에 관한 정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설사 제3국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보안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방국들이 어떤 중요한 기밀·보안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한번 반성을 해야지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관께서도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예.

김종훈 수석대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마치 FTA와 연계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오늘 한국시간 점심경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9월 13일 외통위 회의에서 본 위원이 바로 우리 김

대표한테 질의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본 위원 질의입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FTA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FTA의 선결조건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 간의 의혹이 많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선결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더니 우리 김 수석대표께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번 FTA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답변은 수석이 하셨는데 사실로 믿어도 되는 거지요?' 했더니 김 대표는 '제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김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파트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가 주무부처로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콘택트단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그대로?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지금 속기록 죽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드릴 수 있는 답변도 그대로입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쇠고기를 FTA와 연계하고 있다는 전략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아까 질의는 계셨고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오늘 하루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나 또는 이번 6차 협상 중 실제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했던 공식 브리핑이 두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소고기 검역문제는 한미FTA와는 별개이나'라는 것을 늘 명백히 밝혔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미FTA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 현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부 답변이라든가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이거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실제로 이번 6차 협상에서, 제가 수석대표입니다마는 어느 분과에서 또는 수석대표 차원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소고기의 위생검역 즉 뼛조각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런데 우리 협상대표한테는 전혀 일언반구 그런 의사표시라든가 그런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대해서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의도가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한미FTA 협상에만 전념하는 수석대표이고요. 웬디 커틀러의 직분은 한미FTA뿐만 아니라 코리아 어페어(korea affair)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웬디 커틀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방한했던 기회에, 목적은 FTA 때문에 왔으되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미FTA에 참석한 미국 측 농업 관계 전문가들은 동시에, 한미FTA 협상하러 왔지만 그분들의 업무영역 속에는 소고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FTA와는 별개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고흥길 위원 그런데 국민들 어느 누구도 지금 김 수석의 답변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그러한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위장적인 답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상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고 또 최근에 이태식 대사가 이 문제 때문에 미국 의원들 11명을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 측이 그것을 갖다가 연계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쇠고기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완전히 농림부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FTA 협상단에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식으로 계속 일방적인 그런 해명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통부 특히 우리 김 수석께서도 이미 사안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면서도 사실상 일부러 외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자세가 FTA 협상 자체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은 국익하고도 별로 맞지가 않고 FTA 협상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자세인데 언제까지 그러한 자세로 일관되게 나가실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진짜 소고기 수입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김 수석은 '모르는 문제다.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검토를 하실 생각이나 또는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지금 고 위원님께서 '정부가'라고 하셨을 때 정부는 한미FTA 대표단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 정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현안이 등장했을 때는 분명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자세는 갖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FTA에 관한 한은 이미 양측 간에 FTA가 출범이 될 때 위생검역 문제에서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FTA와는 직접적으로, FTA의 의제안으로 갖고 와서 하겠다 하는 것과는 제가 선을 명백히 그어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생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소고기 수입을 갖다가 협상에 연계해서 그것을 카드로 던질 때, 과연 그러한 연계카드를 던질 때 우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FTA에서 그러한 위생검역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 간에도 FTA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와 찬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이것이 타결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쇠고기 문제 때문에 타결이 안 되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점을 사실 솔직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 정부로서도 일을 하기가 쉬운 일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쉬쉬하고 '소고기, 나는 몰라', 예를 들면 '한의사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막작전만 치고 나갈 때 협상의 본질적인 타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 고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배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 6자회담 준비하시랴 FTA 협상 추진하시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관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진용을 새로 짜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래서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보강이라든지 또는 전략의 새로운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FTA와 관련해서 정보가 누출이 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FTA 추진 전략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FTA추진팀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그대로 일관되게 그 팀이 그대로 되고 있고 전략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러한 틀 내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김현종 본부장님이나 또 김종훈 대표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씩씩하게 의연하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국익에 대한 국민의 동의, 국민적 동의 이 부분이 과연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번 정보 유출 같은 문제도 협상에 있어서 유출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면 이것은 관리를 누가, 당연히 관리책임은 그것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들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국회든 아니면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제 장관이 새로 오셔서 김현종 본부장님이나 두 분께서 이 FTA가 우리 국익을 확보해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되는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예를 들면 국민과의 소통구조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내부 간 이해 집단 간의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을 잘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종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강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FTA특위에다가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다 공개를 했고 또 많은 토론을 갖다 이룬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특위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FTA체결지원위원회에서 많은 홍보와 또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NGO 단체들을 갖다 지금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니까 설득구조도 튼튼해야 되지만 설득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허심탄회한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하여튼 그 소통구조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 외에도 지금 보안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대책도 각 부처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지금 다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지금 뭔가 한번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이번에 납북어부 귀환 문제와 관련해서 선양 영사업무 개선책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인력보강 같은 거 이런 거 불가능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인력을 지금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본부에서 파견하는 직원,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중국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선 위원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정부가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귀향을 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국군포로의 경우에 지금까지 94년에 조창호 소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6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참여정부에서 38명이 왔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면 비중으로 보면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은 숫자가 귀환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참여정부 이전에 29명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양 사태 때문에 국민들 상당수가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점을 찾

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국가 외교적인 국익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핵 문제가 발발했을 때 또 지난번 북한 핵실험 이후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 한반도에서 금방 뭐가 일어날 것처럼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의 기본장이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6자회담 소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 해결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인 남북관계에서 뭔가 신뢰를 회복하면서 잘 진행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갈 수도 있고 최선의 문제 해결로 유도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계속 우리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문제 해결의 최선의 상황을 유도해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가 북·미 간의 신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선후 관계도 있겠지만 병행 관계도 된다고 봅니다.

○배기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달에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보에 관한 아주 명백하고 예측 가능한 매니페스토(manifesto)에 의한 그런 어떤 확실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새로운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 12월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남북관계를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끌고 가서 국익을 이렇게 지키고 평화를 이렇게 지키고 북미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1년 내에는 정상회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그리고 최후의 수단을 써버린 북한의 경우도 하루빨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미국도 국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북한도 살 길을 찾는다고 봅니다. 북·미 회담이 지금 굉장히 진전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볼 때는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제가 볼 때는 금년 내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는 데 있어서 만약에 베이징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의 협상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100% 희망하는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 문제는 12월달에 대통령이 어느 당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시든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시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시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이것을 사전에 가로막겠다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를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를 소위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는 이 정상회담을, 장관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회담은 정당적 차원이나 또는 대선용으로 활용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강구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문제이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박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박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나서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무리하게 또 정치적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해서 참여국들이 북한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시켜야 될 것인가 이 공조체제를 다듬고 있고, 그것도 쉽지는 않고 또 국내적으로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현재 우리 문제를 푸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또는 정부가 정상회담 하는 것을 위해서 꾸미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실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상황이 조성되면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지금은 전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이 시점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장께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죽 브리핑을 하시고 이번 6차 회담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 5차 회담에서도 무역구제분과, 의약품·자동차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실무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돌파구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7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보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문건 유출 파문으로 인해서 특히 무역구제 분과 협상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여전히 무역구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급 접촉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무협상에서 타결이 안 된 것이 고위급 접촉에서 타결될 것으로 낙관할 수 있겠는가, 또 만약 고위급 협의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7차 협상이 2월 12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8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FTA 경제통상 이슈는 가급적이면 많은 이슈들이, 복잡한 이슈들 예를 들자면 의약품이나 아니면 무역구제에 관한 것에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많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 많은 이슈들이 위로,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해결하기가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차 앞으로 8차까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슈들을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지난 7일~9일 하와이에서 양측 고위급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하고 김종훈 수석대표가 하와이에 같이 가서 부대표하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 우리의 요구 특히 무역구제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소위 말하자면 마지노선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진 위원 우리 입장은 다 전달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전달했습니다.

○박진 위원 미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측은 무역구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박진 위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해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미측이 침구사,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또 방송시장 개방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내 한의사계와 방송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측의 정확한 요구사항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선 방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미국 측은 지금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케이블TV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현재 케이블TV의 외국인 지분이 49%인데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자격인정, 라이센스는 오해가 있는데 혹시 제가 답이 부족하면 김종훈 수석대표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자면……

○박진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한의사 자격을 서로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 측도 우리 쪽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서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과목을 얼마큼 들었고 4년제인지 6년제인지 또 그 필수 과목들이 무엇이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박진 위원 지금 인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닙니다.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민순 장관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군포로 가족 송환 문제인데 정말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강제 송환된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12월 초에 돌아가셨다고요. 신의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49재를 치렀습니다. 제가 직접 그 댁에 가서 조문을 표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관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가족분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이나 7일경 우리 국방부로부터 '모든 것이 협의됐다. 가족들을 영사관으로 데려가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10일에 인계하려다가 하루 연기해서 11일에 인계하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 측하고 이미 그 전에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인계방식이나 날짜나 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었고 중국 공안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국 측과 사전에 협의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차질은 우리의 협의 대상은 중국의 중앙정부 당국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쪽은 지방정부 당국인데 그 사이의 연락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 가지고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종전에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죽 진행이 되어 와서 안전하게 다 송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중국 측과, 우리 혼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과 협의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체포당했던 민박집에 대해서 사실 가족들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가족들은 영사관 측에 가족을 인계할 때는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민박집으로 가는 것을 가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무슨 설명이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거기가 지금 처음 간 곳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설명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정확성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박진 위원 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좀더 확인해 봐야 되

겠습니다.

○박진 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족 중 1명이 북송되기 전에 마지막 전화통화를 했는데 '진술서의 내용을 잘못 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너도 위험하니 빨리 피신하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안심하고 모든 것을 인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체포돼서 북송이 됐으니까요. 또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에서 국군포로를 중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공백이 있었는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방식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지금 이게 고의든 착오든 간에 중국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중앙 공안이든 지방 공안이든 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버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절차적인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장관께서 중국에 또 가셔서 이 문제를 협의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그대로 취하게 됐을 때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통 탈북자가 아니라 국군포로와 가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착오든 고의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또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국군포로이고 그다음에 국군포로의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지금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간주되거든요. 그러한 간주가 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중국 측하고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이 영사관에 안 들어가고 민박집에 간 것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국군포로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중 간에 나름대로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북송이 돼서 이들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방치해 버린 결과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인 공백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뭔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나 가족들 또 납북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중 간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되면 절차적인 착오나 고의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결코 이것을 방치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혹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찰에 의한 그러한 자세가 조금이라도 비춰 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박진 위원 이번에 중국 측이 우리 측에 협조를 안 하고 이렇게 체포해서 북송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국군포로의 가족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다 얘기해 주고 또 체포된 다음에도 우리 외교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디 갔는지 확인해 줬습니까? 북송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동에 있었다는데 거기에 있다는 위치도 확인을 안 해 주고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고, 요청을 묵살하고 또 중국 공안이

알고 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참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무력하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것을 설명해야 될지, 그냥 절차상의 공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국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기본적인 업무체계를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중국에 다녀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어떤 자세 전환을 촉구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최근 들어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소위 한미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 멀어져만 가는 양국 사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피로서 맺어진 동맹관계다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을 쓰고 이랬습니다마는 이제는 혈맹이 아니라 동맹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말하자면 단순한 협력관계 이 정도 선이 현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소원한 관계야말로 지금 우리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굉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이 처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금년 우리의 외교는 한미관계의 우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외교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박희태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만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한미 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우호관계를 회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 지금 한미관계가 소원해져 있다 이러는데 하나하나의 현상을 보면 우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공조 위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미국이 FTA를 우리와 같이 어떤 지역규모가 아니라 우리만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하고 FTA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장관, 제가 묻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상황 진단을 간단하게……

○박희태 위원 지금 한미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저하고 인식이 다르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한미관계가 소원해졌나 우호가 더 강화됐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 국민들 또 미국 정계의 반응도 우리와 똑같아요. 이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저는 그런 대답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장관이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답변만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문제나 FTA나 비자면제 협정이나 기지이전 문제나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우리가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잘 취해 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첩경이고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까지 정책을 그러니까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비자면제 협정도 추진하지 말고 FTA도 하지 말고 기지이전 협상도 중단시키고 핵문제에 대한 공조도 하지 말아야 강화가 되겠습니까? 하던 것을 계속 하겠다, 발전시켜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태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무슨 정책을 펼 것 같은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정책을 펼 것이냐고 묻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책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정책적 조치가 계속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희태 위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있는 것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강화·발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이 정권은 소위 자주니 뭐니 해 가지고 그 관계가 자꾸자꾸 느슨해지고 좀 섭섭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러한 대미 외교관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집행한 어떤 의미에서는 장본인이에요. 대미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장본인이 바로 지금 답변하는 장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장관 됐으니까 뭐를 좀 새로 바꾸고, 다들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에게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관계를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엉뚱하게 기존 정책을 그대로……

기존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한미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인식을 전환 못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다섯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시로 든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대한 첩경이고 확실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저는 얼마든지 경청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경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 답변하는 태도 자체도 틀렸고,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답변이에요. 들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이 그렇게 오만하고 반격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촌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진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한미관계가 소원하게 발전했고 특히 군사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작권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대체 전작권 문제도 전시가 되면 오히려 하나의 지휘체계가 성립하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역사이고 보편적인 현상인데 전시가 되면 지휘권을 나누어 가진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라크에 파병한 것을 우리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 크게 협조한 것처럼 하지만 금년 내로 이라크 파병은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정부가 안을 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었고 그런데 이라크에 파병한 것이 뭐가 한미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금년에 끝나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박희태 위원님께서 전작권은 전쟁이 나면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도 다 현상에 맞게 공통의 공동방위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중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알리는 방법이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공손하고 국민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금년 들어와도 대미 외교관계의 무슨 획기적인 전환이나 양국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전통적인 양국의 동맹관

계가 더 느슨해 진다는 이런 우려를 씻을 아무런 정책도, 아무런 방안도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분명한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잘 발전시켜 나가고 기지이전 문제 같은 양자 간의 안보현안도 서로 합의된 데 따라서 잘 진전시켜 나가고 FTA 문제도 서로 협상에 의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박희태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하던 것이고, 재작년부터 하던 것이고, 계속 하던 것이고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씻을 무슨 다른 새로운 정책이 금년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기존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한미관계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새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태 위원 머리가 굳어 가지고 전혀 발상의 전환이 안 되네요. 좀 전환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원웅 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FTA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아까 박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유출이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마치 국회에 어떤 책임이 있는 듯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회에 대한 어떤 보고사항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문서유출이 됐다고 그래서 한미 FTA 협상에서 큰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이 일부러라도 유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FTA 협상에 큰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대로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현종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대표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사항이 프레시안에 사진이 찍혀 가지고 보도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송민순 장관님께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이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신문에 났던 내용 중에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어디에 '여관주인이 신고했다' 이렇게 보도됐다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제단속에서 연행되어 갔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장 가지고는 국회에 대한 보고로서 전혀 충분치 않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런 궁금증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공백이 발생되었다' 이러는데 얼마든지 예기할 수 있는 공백이었고 이런 때는 공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가족 입장에서는 응당 영사관에 인계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영사관의 책임인 것입니다. 거기 무슨 공백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예기할 수 있는 공백이었고 이런 표현은 부적합하다, 국민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어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요. 그런데 마치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계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여관집 주인하고 긴밀히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락수단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예상 못했다는 것이지, 예상을 해야 될 책임이 다 이 정부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언론에 보면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보다는 보다 더 국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한 잘못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 국민도 납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께서 알고 있는, 여기에는 전혀 사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장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해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일반 탈북자하고는 다른 것이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특별하게 법이 있습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납북자 문제는 지금 법안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곧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이 두 법에 의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어요.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 보면 국군포로의 송환에 관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의 책무인데 돌아온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사확인 및 송환입니다. 정부가 세워야 될 생사확인과 송환대책인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정부는 이미 책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무가 뭐냐 하면 국군포로 또 납북자의 생사확인 송환대책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서 요구하는 송환대책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북한 정부한테 송환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북한 정부에 그런 얘기를 못하느냐 그러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니면 북한이 포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법적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올 송환대책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민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전부 다 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집과의 관계라든지 그게 처음 갔던 데도 아니고 종전에 거기를 통해서 송환되었고 또 중국 측과의 국군포로와 가족 신원 확인 절차 이런 데 대해서 합의된 사항들을 제가 다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못 했다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번의 경우에는 굳이 공개를 하자면 그 시점에 한국영사관과 바로 붙어 있는, 담장을 같이 끼고 있는 미국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함으로 해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 공안 당국이 일체 검거하면서 생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순간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국군포로 문제, 유해송환 문제는 이 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유해송환 문제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 송환대책에는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대책도 당

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책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직접 북한 정부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그만큼 지원해 줬고, 우리 인도적 차원에서 다 보내 줬잖아요. 보내 줬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 언제 인계했고 언제 연행되어 갔고 언제 북한에 북송됐는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한 사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게 지금 공개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비공개로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케이스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번 한 건 케이스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비공개로 하신다면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자꾸 그게 공개되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납북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 안 했잖아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납북자 대표도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되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별도로 저한테 정부가 파악한 대로 알려 주시고 그 부분은 가족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것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아까 우리 박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걱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는 암만 장관이시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희태 위원님께서도 지금 정부가 어떤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군을 많이 파견하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입장을 숙여 가면서 열심히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다' 이것은 속으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당신도 특별한 안이 없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얼마든지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탈북자 문제, 탈북자라기보다는 국군포로 가족 북송 문제인데 저도 우리 진영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진영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공백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게 ing인 상태이고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익 차원에서 다 얘기하기가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예기치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미국공관에 갑자기 탈북자가 뛰어 들어간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중앙 공안하고 연결을 했지 지방 공안하고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예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게 중국과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절차에서 그런 공백이 생긴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인계할 수 없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영세 위원 열린우리당에도 설명을 하셨겠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마는 사전에 조율된 절차와 방식에…… 이런 식으로 지방 공안에 의해서 일이 저질러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기할 수 있는 공백이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번 일이 처음 케이스라면 그런데 과거에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통계의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잘 해 왔다는 게 세 번 그렇게 잘 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가는 과정에서 중앙 공안하고 지역의 현지 공안하고 사인이 안 맞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나름대로 조율된 절차를, 그런 예기치 않는 않은 상황도 막을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이게 무슨 예기치 않은 공백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장관께서 말씀을 잘 하셔도,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원래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얼마든지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측 입장에서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 어떤 정권이 자신의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무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을 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것으로만 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소영웅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특히 북한처럼 유일 지배체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마주했을 때 오히려 일이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북한 쪽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만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북한이 무슨 이해관계에서 할지는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권영세 위원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보기에는 북측이 자기가 필요한 이유가 충족이 되면……

○권영세 위원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유…… 필요 없는데 하지는 않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의 사정상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북한이 정상회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이나 심중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북한이 볼 때 그게 북측의 이익에 맞다고 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짐작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상황이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조성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정상회담만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안정,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공통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무리 외교부의 수장이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모호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한 상황에서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지금 가상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세 위원 모든 것을 가상적으로 얘기하시

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회고적으로 검토만 할 수 있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상적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외교부의 주무 업무도 아니니까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북핵 문제를 이슈로 해서, 북핵 문제의 타결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유용하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판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 정도의 판단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현재는 6자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틀이 일단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데 관련국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병렬적인 얘기도 자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북핵 문제는 1차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병렬적으로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6자회담 프로세스를 흩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돌파구를 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착실하게 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6자회담에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질의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적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틀 내에서 갑자기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지금 6자회담이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 해결이 안 됐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장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과거의 얘기는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앞으로의 가정적인 것은 얘기 안 하시겠다고 또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국가의 주요정책이고 거기에서 어떤 어젠다를 가져갈지, 아까 장관님께서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이 과연 유용한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관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회의가 계속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장관님과 좋은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TA 문건이 대외비로 분류돼서 배포가 됐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朴鍾根 委員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대외비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朴鍾根 委員 아니,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3급 비밀이나 더 높은 어떤 비밀 등급으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보통 그렇게 대외비로 합니다.

○朴鍾根 委員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전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또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추궁할 정도의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외비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로 내용에 있어서 아무리 국회에다 제

출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어떻고 한국의 입장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협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대강 그 정도로 보고를 하면 되지 그렇게 상세하게 전략까지 노출시킬 정도의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가 진행 중인데?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朴鍾根 委員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대표기관인 국회에 충실히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朴鍾根 委員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분별력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소위 말하자면 국민 공감대 차원에서도……

○朴鍾根 委員 아니, 정부가 어떤 식으로 타협하겠다는 것까지 국회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국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양자 간에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지 그 범위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는 데까지…… 정부에서 정한 그 전략대로 통한다는 법칙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전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무역구제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FTA 협정을 체결했는데 양보한 전례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이스라엘하고 비합치 이슈에 대해서 양보한 적이 있고 또 중미하고도 양보한 적이 있고요.

○朴鍾根 委員 무역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양보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보니까 공안이 잡으러 갈 때 탈북자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잡으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朴鍾根 委員 '여기 들어왔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고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정보가 다 샌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제단속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글쎄, 일제단속이 아니고 정보가 새서 표적수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그 정황을 좀더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양 영사관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물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근간의 다른 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朴鍾根 委員 이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때문에는 기관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고요.

○朴鍾根 委員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무슨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영사관 전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고……

○朴鍾根 委員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물어서 경고를 했느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 문제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목·금 중국 가서 상황을 더 파악하고 중국하고 협의할 것도 있어서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문책 대상에만 올라가 있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영사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른다 이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있는데 또 외통부에서도 어떤 책임인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문책을 하는 것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이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이 일

단 수습이 돼야……

○朴鍾根 委員 다 잡혀가고 북한에 다 넘어가서, 사람 쫓고 다 끝나 버렸는데 뭐가 진행 중이야.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鍾根 委員 공관에 이런 탈북자,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납북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라 하는 관리지침이 시달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시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개별적인 상황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관리지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관리지침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영사관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으로 대우를 안 해 줘도, 아무런 책임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관리지침 아니냐, 이 관리지침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첫째 들어서 그 관리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중앙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지방 공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처 일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공안 통제권이 지방에 전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朴鍾根 委員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항의를 했습니다.

○朴鍾根 委員 항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항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셔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리고 중국 정부하고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양국 간에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송이라는 것은, 중국 공안에 잡히기만 하면 북한으로 보내 버리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북송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자회담이 지금 모종의 합의가 일어나서 다시 재개가 돼서 곧 회의가 다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토론 과제로 올리는 것에 합의된 수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고요. 그것이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朴鍾根 委員 6자회담 해 봐야 안다 그런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朴鍾根 委員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북핵 폐기를 전제로' 이렇게 나오던데 그 말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폐기라는 것은 폐기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폐기 과정의 시작을 일단 의미하는 것입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니까 폐기 과정의 시작을 정부에서는 북핵 폐기로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려면 무슨 시작이 돼야 끝이 나니까요. 폐기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朴鍾根 委員 지금 얘기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의 북핵 폐기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작이다, 북핵 폐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실패한 예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

○朴鍾根 委員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네바합의는 그 당시 일단 중단을 하고……

○朴鍾根 委員 제네바합의뿐만 아니라 그쪽에다가 원자로도 지어 주고 엄청나게 기름도 대주고 그것 때문에 잘될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햇볕정책도 우리가 많이 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 된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을 인정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제네바합의는 일단 중단된 겁니다.

○朴鍾根 委員 그래서 북핵 폐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북핵 폐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북핵 폐기 시작이라고 분명히 개념을 정해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북핵 폐기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될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북핵 폐기가 완전히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이 북핵 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화협정은 남북 간의 것보다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월 19일 공동성명에 보면 '직접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면 평화협정 문제는 반드시 논의가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평화협정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정부의 구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발전적인 구상이고 그것은 또 우리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련국도 있고 해서 필요한 실무적 수준의 협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과거에……

○朴鍾根 委員 정부의 복안이 있느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만……

○朴鍾根 委員 시안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정부의 어떤 드래프트(draft), 시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돼 있는 드래프트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하기 위한 초안 정도의 수준입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6자회담의 주요 파트너들하고 또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정전협정은 북한하고 유엔군하고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그것을 폐기하려고 하면 유엔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미국 일본 중국은 중요한 당사자인데 일본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협의 대상이라는 거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과거 휴전협정에 중국인민의용군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관련이 돼 있고 미국은……

○朴鍾根 委員 그러면 평화협정의 드래프트나 내용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미 간에 그리고 북한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朴鍾根 委員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런 것을 답변하는데 왜 우물우물하세요. 명백한 일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朴鍾根 委員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장관님께서 외교를 하시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어물어물하고 계시니까 감추는 것이 많지 않느냐고 자꾸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감추는 것 없습니다.

○朴鍾根 委員 감추는 게 뭐…… 답변 안 하는 것은 다 감추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외교통상부가 지금 많은 국민들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알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朴鍾根 委員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

화되고 있는 것은 '외교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북한하고 탈북자 처리 문제도 '눈치만 보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FTA 문제도 '이런 중대한 국사가 신문에 유출되어 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도록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6자회담에서 곧 금송아지라도 나오는 것 같이 자꾸 하는데 지금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북핵 폐기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의문을 외교통상부에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전주시 완산 출신 장영달 위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최근에 만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독일의 베를린 미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회담을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그 이후에 최근에 만나신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지금 북경에 있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베를린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을 위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많이 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힐 대표가 최근에 와서, 지금 북측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6자회담을 빨리 열자는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하여튼 가급적 토론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굳어지는 대로, 왜냐하면 본국 정부에 가서 상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굳어지는 대로 빨리 열자 이런 뜻입니다.

○장영달 위원 설이 돌아오기 전에 6자회담을 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를 통해서 들리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원칙적인 선에서 그러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최근에 크리스토퍼 힐 대표를 만나보시니까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핵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겠구나, 그런 판단을 장관께서는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9월 19일 공동성명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겠다 또 서로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장영달 위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미가 다 6자회담을 열자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북·미가 이미 상당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열리면 돌파구가 열리고 그럴 것으로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돌파구가 하루빨리 열리면 남북관계의 막힌 당국자회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그런 돌파구가 열릴 때 남북회담들이, 다각적으로 막혔던 부분들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실제 6자회담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진작시키는 것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전쟁을 막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보증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남북국회회담 이런 것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과거에 있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남북교류…… 그래서 국회의원급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다각적인 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당국자 간의 회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남북국회의원회담, 정치인회담 이러한 것들을 저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치인들의 교류가 남북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남북을 왕래하고 북쪽 정치인들도 남쪽

을 많이 왕래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유익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남북 간에는 가급적 많은 교류와 접촉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국회가 그런 요청을 한다면 정부로서는 정치인들의 교류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군포로 가족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됐는데 이번 선양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공관에서 북측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 이분들을 보호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국 측에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장영달 위원 중국 측에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북쪽으로 보내버린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중국 측에 한 것은, 우리가 요청을 받은 것은 절차상 우리가 지방 공안당국하고 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공안당국하고 하게 되어 있고 중앙 공안당국에 요청을 했고 중앙 공안당국의……

○장영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국 측은 북한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협약은, 이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협약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 협약에 의해서……

○장영달 위원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당국에서 발견하면 북측에 통보해 준다 그런 협약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국군포로나 가족은 일반 탈북자하고는……

○장영달 위원 별도로 취급을 당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위가 다릅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다면 내일 중국에 가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모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모레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적어도 우리가 보호요청을 한 사람들인데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항의는 이미 해왔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항의보다도, 항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좀더 확실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관이 이 사람들을 방치해서 잡아가버렸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외교부 본부나 선양에 있는……

○장영달 위원 왜 공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공관에 바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국군포로나 또는 가족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영달 위원 좋습니다.

다음 납북 어부 최욱일 씨가 최근에 돌아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때 이 납북 어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당국에서 때때로 월북했다 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모진 고초를 당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입니까? 맞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들은 것 같은데 납북 어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진달래 참 예쁘더라' 그러면 그것도 반공법으로 잡혀간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진 고초를 당하고 산 적이 있어요. 아마 납북 어부들이나 가족들은 공무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납북 어부들이나, 월북자들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가족들이 과거 군사독재 때 선의의 피해를 본 적이 없는가 또 선의의 탄압을 받은 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부가 그분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다음 김종훈 대표 좀 나오실까요?

회담하시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쇠고기 문제 잠시 이야기합시다.

지금 김종훈 대표께서는 '쇠고기 문제를 뼈 있는 것은 돌려보내고 아닌 것은 먹으면 된다, 또 아까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FTA 의제에 넣을 수는 없지만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쇠고기도 FTA 협상과 말려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만 그렇지……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FTA 의제하고는 선을 긋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압력이 대단히 크지요, 그렇지요? 그 압력에 따라서 커틀러 미국 대표가 쇠고기도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FTA 차원은 아닙니다. 한미 간의 별도……

○장영달 위원 그러면 FTA 차원이 아니면 커틀러하고 김종훈 대표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농림부하고 따로따로 얘기하든지 그래야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FTA 대표들이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맞습니다.

○장영달 위원 거기서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맞습니다.

○장영달 위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해야지.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리고 뼈 있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뼈 있는 부분은 뼈만 이렇게 도려내고 나머지 살은 먹으면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지 않다면 됐고……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장영달 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됐고 절대로, 미국이 아무리 대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우방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약속한 건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합의된 것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용납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그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FTA나 이런 것과 관계없는데 제가 정부 국무위원을 따로 만날 일이 없어서 다른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인혁당사건 재판이 있는 것 들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못 들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오전 10시에, 인혁당사건이라는 것은 1974년에 인혁당이라는 분들을 잡아다가, 본인들은 인혁당이라는 말을 들지도 못하고 잡혀와서 중앙정보부의 모진 고문하에 1년여 동안 가족 면회나 변호인 면회 한 번 못 하고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박정희 정권 때 살해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법원에 저도 가 보니까 재판장께서 낱낱이 그런 부분들을 열거하더만요. 어떻게 어떻게 고문을 받고 그랬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 대한민국이나 참여정부의 대한민국이나 국가가 져야 될 책무는 박정희 정권에서 지어진 죄들에도 책임은 지금 정부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의 책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분들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살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

까, 그렇지요? 살아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박정희 정권의 살인사건인데, 사법살인 사건인데 그렇다면 오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인혁당 관련자로 처형됐거나 살아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 하고 무기 받고 나온 사람들도 그 뒤에 온 가족들이 취직이니 뭐니 일체 못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살아남았던 임구호라는 분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그리고 또 특별한 인연도 됐겠지만—사형당한 분의 가족과 결혼한 예도, 이러한 예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이것은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이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정부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일선을, 휴전선은 지키지 않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독재를 야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조작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살인을 자행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분명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아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장관께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김종훈 수석대표의 답변이 아주 기술적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태식 대사가 미 상원의원들 만나서 기술적 해결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미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장관 입장도 그런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오늘 커틀러 미 대표의 발언, 미국 쇠고기 문제하고 FTA하고 연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선결과제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대로 밟을는지 안 밟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회견 내용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선결과제로 먼저 다루고 이게 안 풀어지면 FTA 협상은 없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미국 협상대표가 이야기한 정확한 문장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말의 내용이 실제 공식적으로 한미 양측 간에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데 적용이 되는 말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협상은 협상의 아젠다가 돼 있는 그 한정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이것 저것 필요한 것을 갖다 붙여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영달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연계 짓지 않겠다, 별개의 문제로 나가겠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제 질의에 '만약을 가정하는 질의에는 답변을 않겠다'고 하시겠지만 미국 측에서 선결과제라고 하고 협상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어쨌든 진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여튼 우리 자세를 견지하겠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상호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상호 서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되는 거고 우리의 조건을 고려치 않는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서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은 이미 양보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것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의 답변이나 또는 통상교섭본부

장의 답변이나 김종훈 수석대표의 답변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의 협상 전략에 끌려 들어가서 쇠고기도 어차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별개라고 하지만 이미 쇠고기는 수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하시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는 거지 쇠고기 문제에 내포돼 있는 조건을 벗어나서 그것을 FTA에 연결시켜서 협상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은 그전에도 이야기했고 이것을 선결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4대 선결조건이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예.

○권영길 위원 왜냐하면 여기 통상교섭본부장도 있고 수석대표도 있지만 아니라고 국회 안에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대 선결과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 한미 FTA 협상이 있고 농림부 있고……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한미 FTA 협상에서는 안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 다른 쪽에서 협상해 갖고 푼 것이다,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이든 외교부장관이든 농림부장관이든 재경부장관이든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권영길 위원 아니 제가 나중에, 아니 이것은 장관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답변인데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그것은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분리된다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가서 이것은 FTA 협상하고 관계없고 다른 부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후에도 그런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이태식 대사가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기술적 해결방안이라고 그랬거든, 테크니컬 솔루션(Technical Solution)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아니 이것은 장관께서, 이태식 주미대사가 상원의원들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풀릴 것이다 했는데 이태식 대사의 기술적 해결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쇠고기에 들어있는 뼈 조각……

○권영길 위원 뼈는 제거하고 나머지는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검역 그다음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의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그와 관련된 기술적 배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지적한 겁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뼈 없이,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뼈 조각이라도 들어 있으면 지금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뼈 통째가 아니고…… 그러한 측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태식 대사의 그 답변 이전에 정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는 지금 한미 간에 쇠고기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미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사전 협의가 있었냐고요. 그 답변을……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할 테니까,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어떤 부분……

○권영길 위원 이태식 대사가 기술적 해결방안이 있다고 한 것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거냐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 문제는 양측 간에 계속 정책적인 문제가……

○권영길 위원 아니 답변, 사전 협의가 있었느

냐 없느냐는 답변, 유무만 묻는 건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는 사전, 이태식 대사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권영길 위원 아니 잘 알고 있든 어떻든 답변을 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국 상원의원 만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권영길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기술적 해결방안이라는 게 오늘도 여러 차례 답변을 통해서 나왔지만 뼈 있는 거는 반송하고 나머지는 받겠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이 있거든요. 이 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변화를, 반드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기술적 해결방안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기술적 해결방안은 미국도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안 섞여서 오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도 뼈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뼈가 없게 돼 있는데 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좀더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태식 대사의 기술적 해결방안이 뭡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 기술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수의사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김종훈 수석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태식,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길게 할 필요 없이 이태식 대사가…… 제 질의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이태식 대사가 기술적 해결방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현재 수입위생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을.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기술 협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양측 간에.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냐……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지금 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이 어떤 건데요? 어떤 겁니까?

○권영길 위원 아니 지금……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지금 뼈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왔지만 뼈 없는 나머지는 지금 이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반송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그 반송이 조건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가 있는 겁니까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협의를 하자 이거지요. 기술적 협의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영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

○권영길 위원 지금은 전체, 아니 전체 반송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질의만 던지시고 답변은 안 듣지 않습니까?

○권영길 위원 아니 핵심적인 것은 답변을 회피하니까…… 제가 추가질의에……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아니 기술 협의를 하면서 풀어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체적 반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위생에 문제가 되고 무엇이 없느냐 하는 그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아주 세밀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정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권영길 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뼈가 있었으면 전체 반송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그랬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700상자 중에서 손톱만 한 뼈가 하나 나왔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반송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00상자 중에서 뼈가 하나 나왔지요, 손톱만 한 것이. 그래서 다 돌려보냈지요.

○권영길 위원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게 맞느냐 이것이지요, 기술적으로. 거기에 뭐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지금 어느 편에 서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아니, 저한테 지금 자꾸 내용을 묻는 것 아닙니까? 기술협의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 측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국 답변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제가 어디에서 지금, 기술협의한다고 내용을 넘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반송했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반송했지요.

○권영길 위원 예?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이것이 정부 입장이었지요? 왜냐하면 농림부가 농수산위에서 한 답변입니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맞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맞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변화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렇습니다. 예, 세 번 다 돌려보냈지요.

○권영길 위원 변화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예.

○권영길 위원 지금은 그런데 다시 협상하자고 그러면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논의를 하려면, 결과를 꺼내려면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것이 연계가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한미 FTA를 담당하는 저나 장관께나 아니면 본부장께 이것을 계속 묻고 계신데요. 그것은 오히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물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큰 방향은 기술협의를 하면서 풀어 가야 될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기술협의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한미 FTA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끝내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대의 관심으로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처음서부터 선결과제라고 했고 이것이 핵심적인 논의 쟁점이잖아요. 그다음에 확인하시겠다고 그랬지만 미국 수석대표가 바로 연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뼈가 들어있으면 전량 반송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식 대사의 발언 이후에 농수산위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 다시 재차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읽고 있는데 오늘 여러 차례 장관께서도 또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수석대표께서도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견지되기를 바라고 변화가 있을 때는 정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수입 안 하려는 정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고 뼈가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뼈가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뼈가 없는 쇠고기는 어디까지가 뼈가 없는 쇠고기냐, 그리고 우리가 통관하는데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이지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쇠고기가 FTA 안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는 쇠고기 나름대로의 논리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FTA는 FTA 논리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상임위 질의를 하다가 보면 장관님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것 또 왜 안 주느냐 따지기도 상당히 어색한 경우도 많은데 제가 아까 요청한 국군포로 북송사건에 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언제 인수를 받았고 언제 민박집에 갔고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송이 되었는지를 외교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서면으로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비공개,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것을 비밀로 분류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황 사정이 다 공개가 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국 측 입장……

○진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사실은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언론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은 언론에 이리저리 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일이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위원 하여간 그것이 비밀이면 비밀분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탈북자의 경우 우리 처리지침에 대해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침 자체는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러시면 필요한 위원님이 직접 한번 열람해

주시는 이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록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비밀이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일치할 수도 있고 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비밀이면 예를 들어서 제3자, 언론기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가족들이 달리 파악을 했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치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여치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영 위원 하여간 정부가 파악한 사실을 좀 알려 주세요. 비밀로 할 테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도,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이것도 해 놓은 것을 한번 진영 위원님께 열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예, 그러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문서가 사라졌느니 없어졌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원웅 예, 말씀하십시오.

○배기선 위원 김현종 본부장님, 미국하고 FTA 협상의 금년 일정이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2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7차 협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3월에 가서 아마, 지금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금년 가을 상황은 아직 특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이 시점에서 배 위원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내용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7차 협상 내용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또 8차 협상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

○배기선 위원 어떻든 정부 입장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꾸준히 밀고 가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가 소위 사골, 뼈를 고아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뼈를 고아서 먹는데 사골 이것 수출, 한국에서 수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까 장관님하고 김 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분야지만 쇠고기는 쇠고기 나름대로 논의가 있다고 장관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WTO 회원국입니다.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기준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적 근거 기준은 파리에 있는 OIE가 결정합니다. OIE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위험부위는 이것은 수입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부위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니까 척추 그리고 또 척수, 골, 눈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미국 사람들이 뼈를 먹습니까? 고아서 먹거나 그런 것 없지요? 버리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옥스테일 수프라고 해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꼬리곰탕 같은 수프도 있지 않습니까?

○장영달 위원 자기네들이 꼬리곰탕해 가지고 먹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우리 식의 꼬리곰탕은 아니지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꼬리 부분만 끓여서 콩소메로 물만 뽑아서 먹지요.

○장영달 위원 무릎 같은 거, 뼈 이런 것은 버

립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무릎 그 분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돌박이 부분인데요.

○장영달 위원 사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차돌박이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돌박이 부분이고요.

○장영달 위원 지난번에 FTA 문제로 저희들이 미국을 가서, 우리당의 박영선 의원께서 뼈 전공이더라고. 소뼈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요. 그래서 미국 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고기보다 뼈를 아주 소중하게 달여서 먹는 습관이 있는데 미국 소의 뼈는 한국인들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식성이 다르다, 그것을 당신네들이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과 연결해서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한 달 전부터 한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완전히 빠꾼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서 그 고기 질을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뼈들이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 하나 장관님께 묻겠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미 관계를 많이 묻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지금 이라크에 우리 군인들이 가면 사병 1인당 200만 원씩 우리 국가에서 수당을 주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받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불만이 일견 있어요.

그러면 한미 관계가 지금 왜 소원하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왜 미국에 대해서 해 달라는 대로 좀 더해 주지 안 해 주고 있느냐 이러한 비판인 것입니까? 내용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한미 관계의 실체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고 또 발전적으로, 또 한미 관계가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장영달 위원 물론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환이 잘되어 가고 있고 전환과정에서 물론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는 실체보다도 비쳐지기를 달리 비쳐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정부로서는 그렇게 달리 비쳐지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있는 모양과 비쳐지는 모양이 같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언론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컨대 도대체가 주한미군이 되었건 한미 관계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방국이고 우리가 필요한 맹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잘못 지내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되어서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미국에게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언론의 상식 이하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이 오해하는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보고 외교부장관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안 외교과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은 내용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고 특히 답변 태도에 있어서도 보다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교통상부 소관 한미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임종석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박종근 위원, 진영 위원 등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고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서 외교통상부 정책이나 한미FTA 협상 과정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국민의 여론 수렴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협상 과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홍길 권영길 권영세 김덕룡
김원웅 문희상 박종근 박 진
박희태 배기선 이해봉 이화영
임종석 장영달 정동채 진 영
최 성

○출장 위원(1인)

정의용

○청가 위원(3인)

김원기 김무성 정몽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희 권
전문위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송 민 순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제2차관	김 호 영
외교안보연구원장	이 주 흠
차관보	심 윤 조
기획관리실장	박 준 우
의전장	이 한 곤
아시아·태평양국장	김 재 신
북미국장	조 병 제
구주국장	임 근 형
외교정책실	
실장	박 인 국
국제기구국장	송 영 완
대변인실대변인	조 회 용
조약국장	박 희 권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조 태 열
다자통상국장	안 명 수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단수석대표	김 종 훈
한미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	이 혜 민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한화갑	전남 무안·신안	비교섭단체 (민주당)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위반	2006. 12. 22

○의안 회부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이상배·김광원·이성권·정갑윤·임인배·이인기·이계경·정희수·최병국·안택수·정화원·문희·최경환 의원 발의)

12월 19일 회부됨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남경필·신상진·박희태·김무성·정병국·김명주·정화원·이해봉·이성권·안상수·한선교·임태희·안홍준·서병수·이인기·배일도·이성구·이계경·정의화 의원 발의)

12월 19일 회부됨

대외원조기본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김부겸·최성·이해봉·박상돈·김종률·이인영·강성종·문희상·박찬숙·정성호·김영춘·원혜영·장영달·민병두·조정식·김우남·정장선·염동연·정희수·장향숙·박찬석 의원 발의)

12월 21일 회부됨

○의견 제시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윤호중·김원웅·장영달·김희선·김교흥·주승용·박기춘·정성호·염동연·최성·김형주·양승조·양형일·강기정·김재윤·문희상·신기남·김태홍·이낙연·최연희·김효석·신국환·한화갑·유재건·오영식·김태년·이기우·우제항·이시종·채수찬·배기선·정동채·김영주·김혁규·임종석·김춘진·조정식·노영민·장복심·박상돈·강성종·우상호·정장선·장향숙·김덕규·이상민·임종인·유기홍·김영춘·서혜석·조배숙·지병문·민병두·최재천·조경태·우원식·최규성·이계안·김우남·우윤근·한광원·조일현·문학진·홍재형·한병도·안민석·서갑원·원혜영·이영호·장경수·선병렬·박영선·이종걸·이석현·김종률·서재관·김선미·이목희·최규식·김정권·백원우·이은영·노현송·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12월 20일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 제시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

(2006. 12. 22 황진하·조성태·김송자·이명규·김덕룡·최경환·박형준·박희태·남경필·심재철·정의화·김정훈·정종복·이계진·진영·김희정·이주호·이재웅·홍문표·최병국·이인기 의원 발의)

12월 27일 국방위원회의 의견 제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15 정부 제출)

1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 제시

○동의안 회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06. 12. 19 정부 제출)

12월 20일 회부됨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06. 12. 19 정부 제출)

12월 26일 회부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07.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월 10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07. 1. 8 정부 제출)

이상 3건 1월 10일 회부됨